‘고발사주’도 바쁜데… 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로 논란 자초

“허위 사실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vs “영장 전체 내용 보면 정확한 기술”
“윤석열 수사 집중해도 모자란 시점에 타깃 분산, 힘만 소모” 비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를 본격화하며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절차 문제로 수사 초반부터 발목이 잡혔다.

‘고발 사주’ 의혹 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관련 사건도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에 성급하게 손댔다가 자승자박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는 26일에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대상자들이 절차 문제를 들어 항의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목적은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규명이다.

올해 5월 12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는데, 당사자인 이 고검장이 받아보기도 전에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식으로 외부에 유출됐다.

공수처는 같은 달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3호’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후 6개월 넘도록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24일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을 대상으로 26일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소장 유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에 참여해 달라는 공수처 통보를 공개하며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대검 감찰부도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감찰조차 진행되지 못한 혐의를 두고 유독 수사팀 7명을 압수수색 한다는 취지였다.

26일 압수수색 때도 잡음이 불거졌다. 압수수색을 참관한 검사가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늦게 전달받았다고 반발했고, 공수처는 대상자 1명에 대한 압수수색만 마무리했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압수수색 당사자들은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은 이미 원소속 검찰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은 문제 삼고 있다.

당시자 중 한 사람인 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영장 제시 당시) 임의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실수인지 허위인지 알 수 없어 신청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소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반발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영장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허위라면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으며, 이를 함께 검토하면 ‘파견’이라는 표현은 기소 당시 다른 검찰청에 소속돼 있되 수사 때 파견된 형태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읽힌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영장신청서에 피의자가 ‘성명불상’이라고 기재된 것이 ‘부실 청구’라는 지적에는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며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판사 출신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세 차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장 발부 자체가 부적절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해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굳이 이 시점에 잠자고 있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재개했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는 9월 9일부터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을 피의자로 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체포·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100일을 앞둔 상황에서 윤 후보 수사를 시급히 마무리해도 모자랄 판에 공수처로서는 급하지 않은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엉뚱한 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1시 46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한 플라스틱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김포 플라스틱 공장 화재… 1개동 소실

화장실서 발화… 인명 피해 없어

김포시의 한 플라스틱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1개동이 소실되고 완제품이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9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46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플라스틱 가공공장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방국은 장비 24대, 소방관 64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오후 2시51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샌드위치 패널구조인 공장 1개동 500㎡가 소실되고 다른 공장 200㎡가 그을렸다. 또 플라스틱 성형기 6점과 완제품 등이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도균 기자

檢, 50억 클럽 수사 박차… 곽상도 前 의원 구속영장 청구

곽의원 지난 27일 피의자 소환
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검찰, 퇴직금 50억원 범죄수익 의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 후 계좌 10여 개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동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도균 기자

전직 육군 장교, ‘업무상 위력 성추행’ 집행유예 2년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2세 연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무고로 2차 가해를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40대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육군 모 사단 장교로 근무하던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자리에 동승한 여군 부하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소를 당한 후 B씨가 자신의 턱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했으며,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고도 고소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아 맞고소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도균 기자

경기신문이
경기·인천지역 지방지 최초로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UBSCRIPTION

문의전화
031-268-8114

연간 구독자에게는
박재동 화백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만평을
액자에 담아 개별 연락 후 보내드립니다.

무통장입금
농협 317-0001-9443-21 [입금주 : 경기신문]

최초 결제일로부터 메일링 서비스 제공
1개월 구독권 - 10.000원 / 1년 구독권 - 110.000원

해당 서비스는 유료이며,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 분들은
경기신문 홈페이지 (www.kgnews.co.kr)
우측상단 ‘온라인구독’ 클릭 → 구독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